

두산전자를 위한 변명

李政勳

〈월간조선부기자〉



1991년 3월 16일 대구시 상수원인 다사수원지에 폐놀이 섞인 물이 흘러 들어옴으로써 촉발된 두산전자의 「폐놀 유출 사건」.

한국언론사상 한 기업의 누출사고를 갖고 모든 언론이 그렇게 장시간 비판하고 떠들었던 예는 일찌기 없었을 것이다.

한국 공해사건의 대명사가 된 폐놀유출사건의 전말은 보다 냉정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두산전자의 폐놀유출사건이 확대된 것은 도하 각 언론이 「염소와 섞이면 발암물질(클로로페놀)로 변하는 폐놀 3백25t이 비밀배출구로 무단방류되었다」고 보도하면서였다.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은 언론 보도와 달랐다.

우선 두산전자에는 비밀배출구가 없었다. 폐놀원액은 지하에 매설된 파이프에서 새 나와 파이프 점검용으로 만들어둔 맨홀에 고여있다 차올라, 우수(雨水)관로를 따라 흘러나간 것이지 비밀배출구로 무단방류한 것이 아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폐놀원액은 폐기물이 아니다. 제품의 원료이다. 아무리 공해문제를 외면하는 악질 기업주라도 원료를 내쫓을 사람은 없다. 맨홀과 연결된 우수(雨水)관로는 한때 비밀배출구로 오인되기도 했지만 빗물을 빼내기 위한 단순한 관이었다. 비밀스럽게 배출구 끝을 감춘 것이 아니다.

클로로페놀은 발암물질이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클로로 페놀이 섞인 물은 심한 악취가 날 뿐이다. 클로로 페놀로 인해 암이 발생했다는

보고는 아직 없다고 한다.

폐놀이 섞인 수돗물을 먹은 사람중 기형아 출산을 우려하는 임신부가 많았다. 그러나 두산전자가 유출한 폐놀의 회석 정도는 기형아의 출산을 만들 정도는 아니었다고 한다. 또 수돗물에 회석된 두산전자의 폐놀 양으로는 인체에 별다른 위해(危害)를 가하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언론이 두산전자의 폐놀 유출사건에서 문제 삼았어야 할 것은 공장이 고의든 과실이든 유해한 물질이나 폐기물을 유출했을 때 처벌할 법이 없다는 한국 환경법상의 허점이었다. 교통사고의 경우처럼 과실에 의한 사고도 처벌할 수 있는 범조항이 없었던 점을 문제 삼았어야 했다.

환경처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고의성이 없는 누출사고 일지라도 인명을 사상(死傷)케 한 경우 최고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환경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만들었다. 늦은감은 있지만 안만 드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조치였다.

또 문제 삼았어야 할 것은 나

동강의 수질을 담당하는 기관이 경남·경북도, 부산시, 수자원공사 등으로 나뉘어져 있는 점이였다. 하천의 수질 개선을 꾀하려면 여러곳으로 나뉘어져 있는 하천 관리권을 한곳으로 집중시켜야 한다. 다음은 한 환경문제 전문가의 말이다.

'91년 3월은 갈수기였던 때다. 낙동강 수량이 줄어들면 각 공장에서 배출허용치 이하로 오염물질을 내보내도 낙동강의 오염도는 높아진다. 두산전자는 운이 없어서인지 가장 나쁜 시기에 유출사고를 일으켰다. 만약 두산전자사건이 홍수기인 7,8월에 일어났다면 것처럼 시끄럽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 수자원공사에서는 용수를 팔아먹기 위해 또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서만 물을 가둬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갈수기 때는 적정수량의 물을 환경용수로 방류해야 한다. 그래야만 예상치 못한 유출사고가 일어나더라도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이 전문가는 하천에 댐을 만드는 치수정책이 최상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댐 담수면적보다 1.5배 정도 면적의 산에다 나무를 심을 경우 그 댐이 연간 생산하는 용수(用水)를 만들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댐을 만들면 부(富)영양화문제, 토사퇴적 문제, 환경용수 방류문제, 용수확보문제 등 서로 모순되는 문제가 일어난다』 『댐을 만드는 대신 숲을 잘 가꾸면 부영양화도 토사퇴적도 환경용수

환경관리인. 1992.1

“

언론이 두산전자의 폐놀 유출사건에서 문제 삼았어야 할 것은 공장이 고의든 과실이든 유해한 물질이나 폐기물을 유출했을 때 처벌할 법이 없다는 한국 환경법상의 허점이었다.

”

방류 문제도 용수확보문제도 서로 충돌하지 않고 해결된다』고 설명했다.

폐놀 유출사건은 「환경당국이 공해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을 불러 일으켰다. 그러나 당국은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대도시 상수(上水)원 상류에 공단이 있으면 당연히 수질시비가 일 수 밖에 없다. 차후 각 지방에 건설되는 공단 및 농공단지 등은 반드시 상수원 하류에 만들도록 해야 한다. 또 환경당국은 각 공장에서 처리한 배출수를 모아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각 공장 배출수가 모이는 지점에 만들어야 한다. 즉흥적으로 단속을 강화하는 정책

을 취할 것이 아니라 공해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를 제거하는 쪽으로 정책을 밀고 나가야 한다.

두산그룹은 폐놀유출사고가 터진 후 “대구시에 2백억원을 수질개선기금으로 기부하겠다” “폐놀이 섞인 수돗물은 폐기처분한 대구시 상수도 본부에 대해 상수도요금을 지급하겠다.” 피해 입은 주민에게 전액 배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두산전자는 상수도요금(15억원)을 전액 납부했다. 2백억원은 대구시 사정으로 지급이 연기되었는지 언제든지 내놓겠다고 한다. 피해주민들과는 1백50여억원(주민들 요구액)의 피해건이 해결되지 않았지만 이미 지급한 금액은 10억원을 넘고 있다.

공해사범으로서 두산전자는 죄값을 치를 만큼 치른 것 같다. 여론재판식으로 공해사건을 다뤄 보상비나 받게해서는 우리의 공해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관은 구조적인 문제를 풀어가고 기업주는 자신이 내쫓은 공해물질이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인식을 하고 지역주민은 그 또한 공해기여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새로운 묘안을 찾아야 한다.

아무리 환경문제가 심각해도 공장 가동을 멈출 수는 없다. 맑은 공기, 깨끗한 물 만큼 먹고 살 수 있는 제품도 중요하다. 그들은 항상 모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